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점 추진과제

1. 서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자는 9만여명,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2,000명을 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국가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지만 이렇듯 안전분야가 매우 취약하기에 아직까지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 해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안전'의 심각성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고용노동부에게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 산업재해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여러 특단의 산업안전정책들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행했던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 11월에 중장기 대책으로 야심차게 마련됐던 '안전실터 만들기 4대 전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대책을 아우르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플러스)'를 수립·발표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5년의 주기로 발표되는 것으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 이 계획을 발표했지만, 재해 증가세를 감안해 대폭적인 변경에 들어가 연말 그 수정판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에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정책의 기초가 모두 반영되어있다. 사고성재해 다발 업종 집중 관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2014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중심이 될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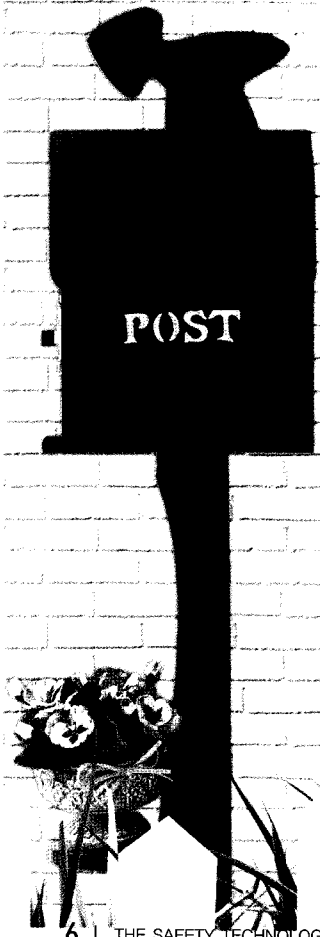
2.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투자는 매우 미흡했다. 여기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여성 및 고령근로자의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 자체도 급속히 변화해왔지만, 각종 산업안전의 정책이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어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는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산업재해율도

(2001년~2009년 산업재해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재해자	전체 (비중)	81,434 (100)	81,911 (100)	94,924 (100)	88,874 (100)	85,411 (100)	89,910 (100)	90,147 (100)	95,806 (100)	97,821 (100)
	장해자 (비중)	25,360 (31.1)	26,354 (32.2)	30,356 (32.0)	33,899 (38.1)	36,973 (43.3)	38,597 (42.9)	35,793 (39.7)	36,883 (38.5)	35,273 (36.1)
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0.77	0.72	0.71	0.70	
근로자 총인구 (십만명)	535	540	591	615	691	711	639	700	519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전략 1.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능력 배양

-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충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유도

전략 2. 안전보건시장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시장 부문별 활력 제고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

전략 3. 안전보건관리 유인 재설계

- 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 사업장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 재해예방 친화적 산재보험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전략 4. 근원적 안전보건관리 추진

-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유해물질 관리 체계의 선진화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전략 5.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확충

- 교육 내실화 및 문화 확산
- 지역 안전보건관리망 확충
- 통계 혁신 및 정보체계 구축

〈대상별 안전보건대책 추진〉

전략 6. 산업 특성별 맞춤형 대책 추진

- 국가 기간산업 재해예방 대책
- 건설업 재해예방 대책
- 서비스업 재해예방 대책

전략 7. 안전보건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

- 고령자 여성
- 비정규직·일용근로자
- 외국인
- 취약직종 근로자(환경미화원)

10년째 0.7%대에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손실일수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6천만일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산업재해로 인해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매년 산재로 인한 직간접손실액은 17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앞으로도 사업장의 소규모화, 서비스업의 증대, 직장이동성의 강화, 산재 취약계층의 증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비율 증가 등의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안전보건 환경도 계속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그 동안의 획일화된 규제와 관 주도의 단편일률적인 방식으로는 재해감소에 한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산재예방 5개년 계획+'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내용

〈전략 1〉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를 2012년까지 시범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난해(4,500개소)보다 대폭 늘어난 5,000개소를 대

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관리체제도 확충된다. 업종별 재해율, 유해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자격 기준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및 사업장의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밖에 300인 미만 사업장(100인 미만 우선 추진)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면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안전보건활동비를 융자 또는 보조 등으로 지원해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으로 지정, 2014년까지 10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 30~50인 사업장, 2012년도 20~30인 사업장, 2013년 2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중점 추진된다. 안전보건반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된다. 최초 양성교육은 16시간, 이후 보수교육은 양성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8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원·하청 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정부포상 시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략 2〉 안전보건시장 활성화를 통한 역할 분담

유해위험요인 발굴·모니터링 시장, 안전보건 관리·컨설팅 서비스시장, 보호구·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시장, 안전보건 교육·홍보서비스 시장, 안전보건 연구·개발(R&D) 시장 등을 활성화시켜나키면서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중 안전보건 관리·컨설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사업장에 대해 '의무 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종합 진단·평가하는 '종합 컨설팅기관'으로 육성시켜나키기로 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기관을 다양화시켜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안전보건서비스를 업종·규모·근로자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 3〉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유인 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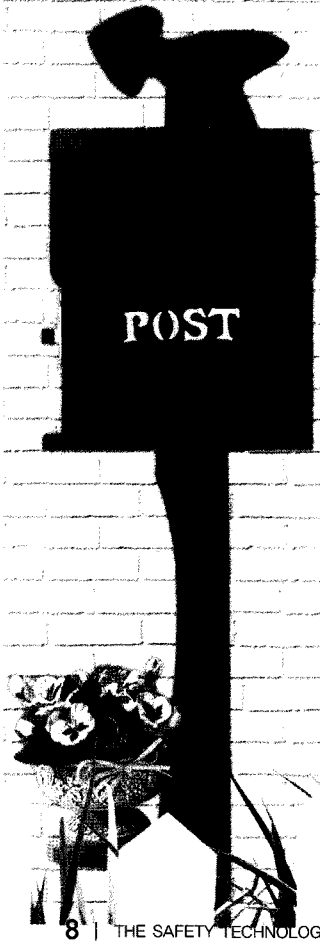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나서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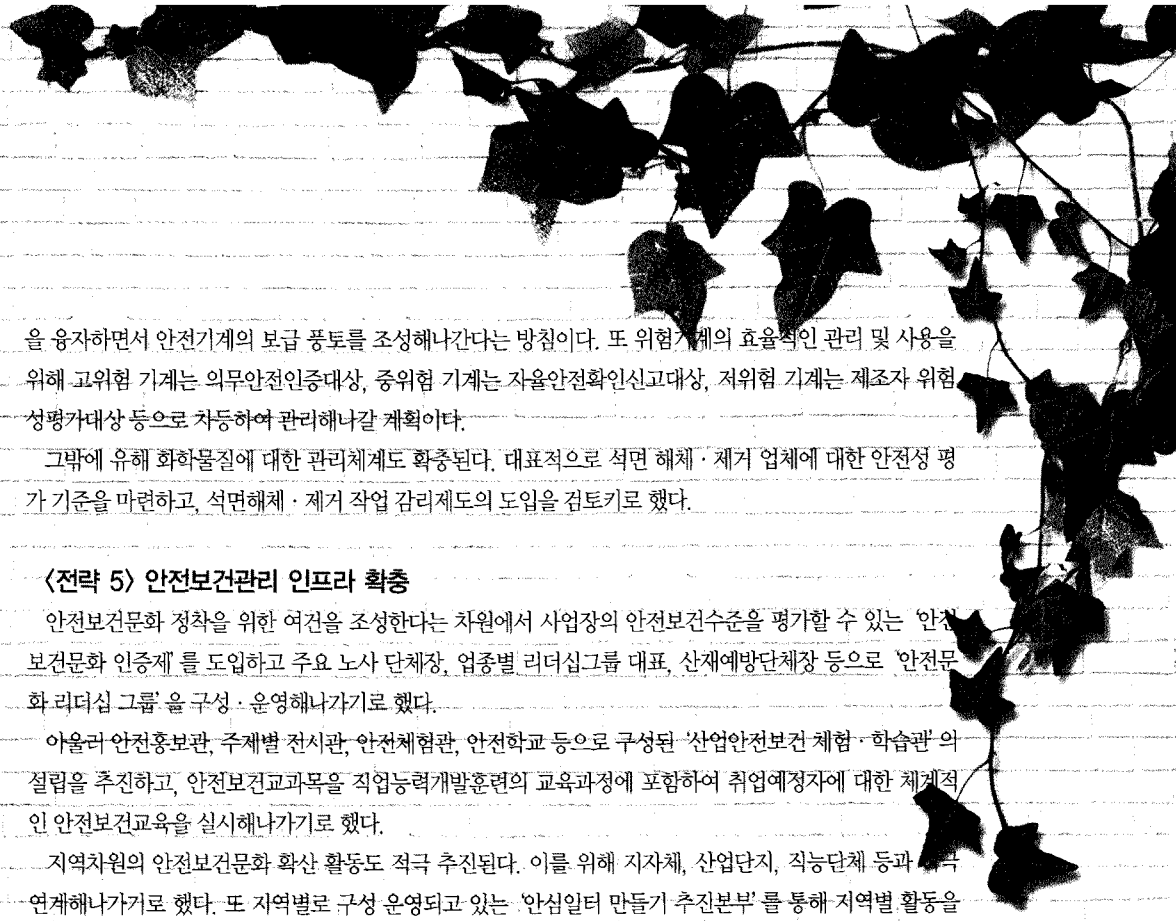
반면 점검·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조치 없이 위반 횟수별로 두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현행 행정형벌 중심의 처벌체계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형벌은 중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적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법 적용 업종을 확대하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등 재해다발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의무를 부과하던 방안이 추진된다.

〈전략 4〉 근원적 안전보건관리 추진

현재 안전보건관리 산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설계·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는 안전성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산재다발 산업기계 중 우수등급 제품 구매자에게 '산재예방 시절자금'





을 용자하면서 안전기계의 보급 풍토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고위험 기계는 의무안전인증대상, 중위험 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저위험 기계는 제조자 위험성평가대상 등으로 차등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도 확충된다. 대표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제도의 도입을 검토기로 했다.

〈전략 5〉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확충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요 노사 단체장, 업종별 리더십그룹 대표, 산재예방단체장 등으로 '안전문화 리더십 그룹'을 구성·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홍보관, 주제별 전시관, 안전체험관, 안전학교 등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체험·학습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교과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취업예정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차원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산업단지, 직능단체 등과 적극 연계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통해 지역별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정보의 활용성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조사'를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국제비교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요양 재해자 통계와 함께 휴업 재해자 통계도 병행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통계를 분리하고, 업무상사고에서는 통근·출장 중 교통사고, 폭력, 체육행사사고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재해지표를 '재해자 수' 또는 '재해율'에서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율' 또는 새로운 '산업재해 지수(예: 휴업한 사고성 재해자 수(통근·폭력·체육행사 사고 제외) / 환산 전입 근로자 수(경찰조사 근로자 수 활용))'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실업률과 고용률,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거시경제지표와 산업재해의 연계 분석도 적극 추진된다.

〈전략 6〉 산업특성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재해다발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은 서비스업, 자동차제조업, 철강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종이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원청사업주에는 포괄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교육 등 서비스업의 법정교육과정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한 규정을 반영기로 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및 철강제조업의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재해다발 순위(3년간) 상위 700대 기업(원청 및 하청)의 경우 자체 예방활동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때 20억 미만 현장에 대한 안전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현장조장, 감리원, 기술사 등을 건설안전지킴이로 지정, 2011년도 2만 5천개소, 2012년 이후에는 3만개소 현장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실시해나간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가설기자재 및 구조물 안전기준 등을 조선업 재해위험특성에 관도록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모기업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지킴이

기준도 상시근로자가 일정비율 증가하면 추가선입(현행 500인 이상인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2명)하는 방향으로 차등화시킬 계획이다.

화학업종과 관련해서는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PSM 적용 화학물질을 현행 21종에서 2014년까지 EU 수준(38종), 2015년 이후에는 미국 수준(137종)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략 7> 안전보건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 일용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자 다수고용 및 재해다발 업종(서비스업, 건물종합관리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재해예방을 추진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미혼기, 출산양육기, 중년기,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규모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 현재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조선업 일용 근로자에게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4. 결론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목표>

- ◇ 근로손실일수(2005~2009년 평균 휴업일수 기준) : 30% 감축 (325만일 → 228만일)
- ◇ 사고 사망자수(2005~2009년 평균 사고 사망자수 기준) : 30% 감축 (1,392명 → 974명)
- ◇ 사고 재해(천인)율(2005~2009년 평균 휴업 사고 재해자 기준) : 30% 감축 (4.45 → 3.12)
- * 기존 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목표인 재해자수 6만명대 및 재해율 0.5%대 달성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을 지난해 0.7%에서 2014년까지 0.5%대로, 사망만인율은 1.57에서 2014년까지 0.74로 대폭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3가지 목표를 더 세웠다.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을 2014년까지 30%씩 감축(현행 : 325만일, 1,392명, 4.45)한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려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위의 정책들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안전유관기관, 학계, 산업현장 안전관계자,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위의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만 해나가는 것으로도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은 크게 높아지고, 정책의 효과가 산업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산업안전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